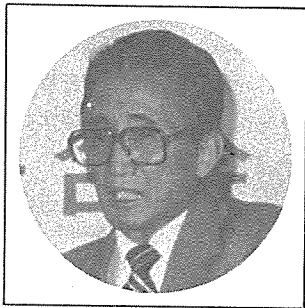


과학기술정책개발과 「科總」의 역할

“科學技術정책연구소 설립운영대두..”



朴 益 洙

〈韓國科學著術人協會회장〉

◇ 科總의 役割

우선「科總의 役割」이 과연무엇이며 또 무엇이 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科總」이 「會員團體의 입장」과「政府의 입장」이란 두 立場의 中間에서 二重的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會員團體의 입장에서는 會員團體의 권익을 옹호하고 그 활동여건을 보다 좋게 조성및 개선하고 가능하면 지원도 하며, 그리고 會員相互間의 유대와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더욱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政府에 대하여 建議도 하고 진정도 해서 政府에 대한 善意의 壓力團體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 다른 側面인 政府의 입장에서는 政府에 있어서의 科學技術振興에 대한 政策 및 立場등 계획의 수립에 會員團體의 입장에 서서 이에 積極參與하고 협력함과 동시에 결정된 여러 科學技術政策 및 法令에 대하여 會員團體에 잘

이해시키고 그것이 잘 수행되도록 협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때의 「科總」은 그 두 立場에 있어서의 基本姿勢는 어디까지나 會員團體의 입장을 굳게 견지하여야 하는 것임을 두 말할 필요가 없다.

◇ 科學技術政策의 定義

「科學技術政策開發」에 대한 「科總」의 역할을 설명하기 전에 「科學技術政策」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것에 대한 확실한 定義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조사하여보면 一定한 定義는 없으며, 그러한 여러 表現中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定義는 UNESCO가 發行한 “The appli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the development of Asia, Basic data and consideration” 이라는 책 속에서 定義한 것인데 이것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한 나라의 綜合開發目標과 國際的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科學技術潛在能力을 증대시키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의 조직화와 그 운용계획에 관한 總體」라고 하였다.

이것을 다시 풀어 說明하면 한 나라에 먼저 國家의 綜合開發政策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한 政策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나라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科學技術能力을 제도적으로 조직화 하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科學技術政策」이라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물론 어떤 國家政策을 전제하지 않고, 科學技術振興自體에 대한 政策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단순히 科學技術自體의 振興政策일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政策이라 할지라도 國家의 적극적인 投資와 支援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그렇게 추측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겠다.

실제에 있어, 經濟社會開發政策이나 工業化政策등이 前提되지 않는 그러한 「科學技術政策」이 國家政策으로 요구되는 일이 거의 없고 또 그렇게 요구되지 않는 것이 상례라 하겠다.

따라서 한 나라의 科學技術政策은 그 나라의 國家政策의 테두리(Flame Work)안에서 그 政策目標가 설정되고, 또 그러한 國家目標에 부합되도록 科學技術政策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 科學技術政策의 실태와 문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科學技術이 政策的으로 인식되어진 것은 1962년도에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부터이고, 이에 따라 경제개발5개년계획목표의 테두리 안에서 科學技術振興5個年計劃이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계속 추진 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科學技術振興을 위한 여러가지 法令과 새로운 기관 그리고 많은 政策들이 만들어 졌는데 이것들 중에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법령으로는 科學技術振興을 위시하여 기술개발촉진법, 기술용역육성법, 국가기술자격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과학기술진흥세법, 산업기술개발주식회사법, 산업기술연구조합법,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등이 만들어졌다.

機關으로는 1967년 科學技術振興法의 공포와 더불어 科學技術處의 발족을 보게 되었고, 이에 따라 政府 特定研究機關으로, 韓國科學技術研究所와 韓國科學院(현재의 韓國科學技術院) 및 電子通信연구소, 電氣연구소, 機械연구소, 化學연구소, 海洋연구소, 動力資源연구소, 標準연구소, 시스템공학센터 등 出捐研究機關(즉 戰略研究機關)들이 신설되었다. 동시에 韓國科學財團, 韓國技術檢 定公團, 技能大學, 科學技術大學, 유전공학센터, 産業技術開發株式會社, 企業技術支援센터 등이 설립되었다.

다음 政策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은 세밀히 調査檢討한 바는 없지만) 科學技術振興5個年計劃 외에 長期計劃으로 처음 만들어진 것이 1968년도 「科學技術開發長期綜合計劃案」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1980년대에 자주기술개발능력을 확립하여 中進工業國家들 중에서 最上位 順位에 위치하는 것을 目標하여 만들었던 것이다.

그 후에는 前述한바와같은 많은 法令, 새로운 기관들이 만들어 졌을 뿐 科學技術振興5個年計劃 이외에 특별한 政策開發活動은 별로 볼 수 없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가지 화려한 政策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물론 이것은 大統領主宰下의 科學技術振興廣大會議가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때 발표된 主要한 政策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企業의 技術革新 촉진대회(1982년)
- 科學技術教育振興方案(1982년)
- 技術情報 流通 體系구축방안(1984년)
- 半導體技術도약을 위한 공동개발계획(1984년)
- 新素材개발동향과 지원정책(1985년)
- 에너지절약技術開發3개년계획(1984년)
- 主要輸入國製品 國產化추진을 위한 技術開發綜合計劃(1985년)
- 理工系大學 實驗 實習 장비의 국산화기술

개발추진계획(1985년)

- 産業現場 基盤技術의 高度化方案(1985년)
- 2000년대를 향한 先進圈進入을 선도할 核心
- 科學技術頭腦의 國策的 養成 확보대책(1985년)
- 技術개발을 통한 外債節減方案(1985년)
- 主要部品 品質向上 및 國産化推進對策(1986년)
- 엔지니어링産業 育成對策(1986년)
- 2000년대 科學技術發展 長期實踐 計劃(1986년)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의욕적이고도 눈부신 政策開發의 결과로써 科學技術투자면에서도 1967년도에 GNP 대비 약 1%정도인것이 현재2%선을 넘어섰고, 그 절대액수도 當時의 약100배로 증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쨌든 우리 科學技術界로서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새로운 法令들이 現在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고, 그 새로운 研究機關과 支援機關들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으며, 그 모든 意慾적인 政策들이 內實있게 잘 施行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 理由가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問題들이 오늘날 우리들을 매우 궁금하게 하고 있다고 하겠다.

사실, 科學技術振興을 위하여 새로운 法令을 만들고 새로운 機關들을 세우고, 새로운 政策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結果들을 냉정히 비판하고 평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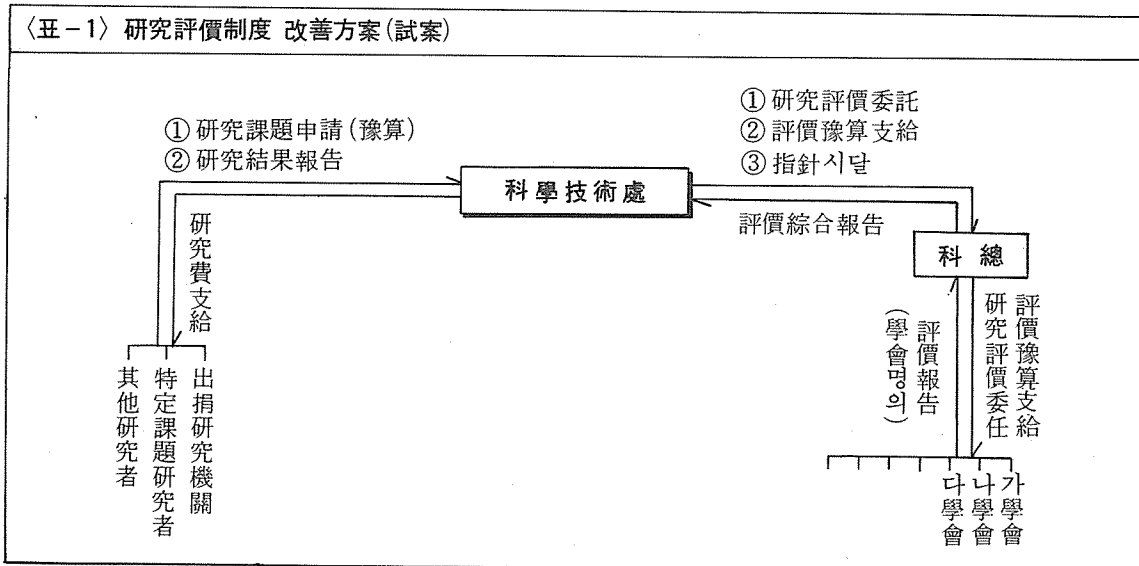
科學技術振興에 대한 좋은 政策을 세워 보다 많은 豫算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豫算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음 事業을 선택하고, 事業을 관리하고, 그 結果를 최종정리하는 이 모든 과정과 방법에 대한 엄격한 비판과 평가를 하지 않으면 그 곳에는 無誠意, 무책임으로 인한 많은 낭비가 예측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研究管理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現行 研究評價制度에 대해서도 많은 회의를 갖고 있으며 이것도 우리가 다루어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개발과제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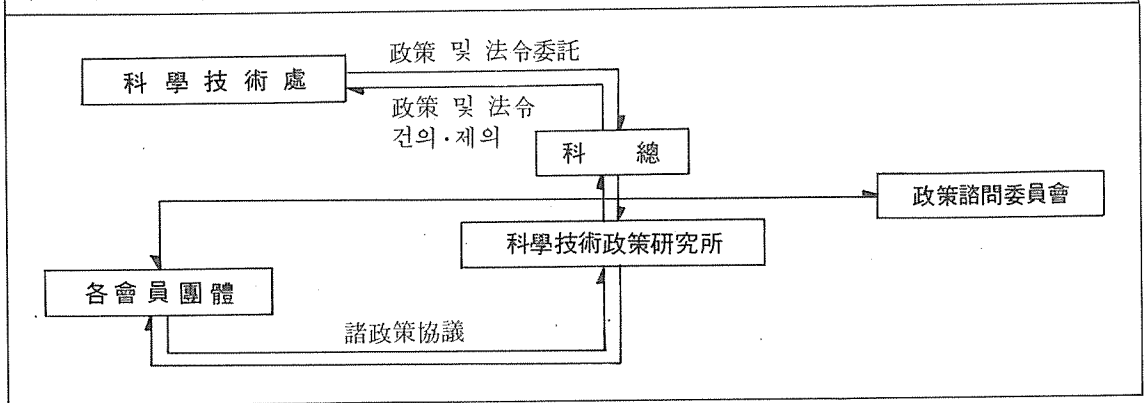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現行研究評價制度를「科總」主管下에 會員團體를 활용하는 것을 제시해보면 <도-1>과 같다.

이때에 問題의 선정에서 부터 결과에 대한 평가는 關係學會의 名義로 評價報告하도록 하게하며 특히 研究結果는 義務의으로 學會에서 正式發表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所要豫算은「科總」管理下에 關係學會에서 사용

<표-1> 研究評價制度 改善方案(試案)



〈표-2〉가칭 「科學技術政策研究所」設置運營



하도록 한다면 그 평가는 現在보다 客觀性과 責任性이 있을뿐 아니라 學會活動의 활성화도 기할 수 있어 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현실적인 政策的問題는 이 외에도 尖端技術에 대한 接近方法 및 國產化方法, 長期計劃에 대한 人力養成문제, 基礎研究機關의 設립, 科學技術情報센터의 원상회복문제,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設立등 찾으면 數없이 많다고 생각한다.

◇問題의 對處方案 科學政策研究所의 設置

새로운 法令, 새로운 機關, 새로운 政策이 많아지고 그것에 따라 豫算도 많아지면 이것을 다시 改善하고 補完하며 더욱 새로운 立法및 機關은 물론 政策을 요구하는 政策問題들이 그만큼 많아진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또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政策問題를 찾고, 그問題를 政策化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問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며 분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政策研究를 하고 政策計劃을 하는 직업이 先行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業務를 擔當하는 機關으로 「科總」산하에 科學政策研究所같은 政策研究機關을 設치하여 이것을 直接運營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科總」에 勸誘하고 싶다.

물론 이 機關은 「科總」活動에 있어서의 가장

核心的인 機關이 되어야 하며 「科總」은 이것을 중심으로 會員團體와의 활발한 政策協議를 하는 한편 政府에 대한 政策活動을 보다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또 政策開發活動에 있어서의 「科總의 役割」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結 論

첫째, 「科總」은 會員團體의 입장에서 일하여야 할 역할과 政府의 입장에서 일하여야 할 역할의 두 측면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科總」은 두 側面의 役割에 있어서의 그 基本姿勢는 언제나 會員團體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科總」은 會員團體의 權益과 活動여건의 조성 및 개선 등을 위하여 政府의 政策開發 및 법령관계 등에 積極참여하고 협력하는 동시에 「科總」이 主體의으로 政策開發하여 이것을 提議하고 建議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째, 그러한 政府의 政策 및 法令 활동에 참여하고 또 基本的으로 政策 및 法令등 활동을 뒷 받침하는 支援機關으로 「科總」산하에 가칭 「科學技術政策研究所」를 設치·운영하는 것을 勸誘한다.